

최상철 "지역정책, 균형보다 분권·협력"

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21일 "참여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너무 균형에 치중했다"면서 "새 정부는 분권, 협력, 광역의 개념을 중시할 것"이라고 말했다.

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주재로 열린 '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'의 겸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' 이후 기자들과 만나 "국가균형발전위의 명칭을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하기 위해 국회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"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.

그는 이어 참여정부 시절부터 논란이 돼 온 수도권 규제완화 및 혁신도시 건설 문제와 관련, "'선(先)지방발전-후(後)수도권 합리화'와 '선 공기업 지방이전-후 혁신도시 개발'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"고 말했다.

다음은 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.

--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명칭이 지역발전위원회로 변경되나.

▲특별법에 의한 위원회 명칭이기 때문에 국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. 참여정부에서 너무 균형에 치중했으나 새 정부에서는 분권, 협력, 광역이라는 개념을 중시할 계획이다. 새 정부는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전정책적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.

--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의 구체적인 방안은.

▲이미 동서남해안개발특별법 등은 법제화가 돼 있다. 새 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광역경제권 구상으로, 시도별로 통합적인 경제권을 구축하려 한다.

--새 정부 지역발전정책이 지방 중심, 수도권 후순위로 바뀌는 것인가.

▲위원회의 확고한 방침은 '선(先)지방발전-후(後)수도권 합리화'이며, 혁신도시 정책도 '선 공기업 지방이전-후 혁신도시 개발'로 기존의 정부 정책과 바뀐 게 없다. 혁신도시의 경우 어떻게 하면 더 자족적이고 자생적인 도시로 발전시킬 것이냐의 고민이지 정책의 전환은 없다.

--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.

▲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수도권의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교부세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다. 아울러 법인세, 부가세가 전국평균을 초과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지방에 일정비율을 환원한다는 계획이다. 이런 인센티브를 지방 및 광역특별회계 제도를 개편하려 한다는 계획이다. 그러나 지방소득세 및 지방소비세와 관련해서는 도

입할 경우 빈익빈부익부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어 연구과제로 남겨두기로 했다.

--수도권 규제와 지방발전의 정책 상관관계는.

▲선 지방발전-후 수도권 규제 합리화라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. 여러가지 시책을 추진했을 때 지방에서 피부에 와닿는 개발이 될 때 수도권 규제를 점진적으로 합리화하겠다는 것이다. 지방의 의사에 반해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방침이다.

--국토해양부가 지방이전을 전제로 한 공기업 민영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의 공식입장인가.

▲그렇다. 균형위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가 끝난 사안이다.

--공기업 이전대상 지역의 변경이 가능한가.

▲변동은 없으나 다만 공기업이 통합될 경우는 예외다. 예를 들어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, 주공 이전 예정지인 경남 진주와 토공 이전 예정지인 전북 완주가 조정을 해야 한다. 그러나 승자독식주의는 될 수 없으며 지자체간 양보와 협의를 통해 조정되도록 할 것이다.

--광역경제권 구상에서 행정구역 개편도 함께 논의되고 있나

▲행정구역 개편은 논의한 적이 없다. 이는 발전정책적 측면보다 더 큰 국정과제다. 이와 별도로 광역경제권의 경우 초기단계에서는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추진하되 성과를 보가면서 추진기구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.

-- 수도권 규제 합리화 이전에 지방발전을 우선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지방이 발전해야 규제합리화를 할 수 있나

▲지방발전과 수도권규제 합리화의 계량적인 시점을 말할 수는 없다. 다만 지방발전이 어느정도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다. 혁신도시의 경우도 공기업 민영화가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났을 때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.

humane@yna.co.kr

(끝)

<저 작 권 자(c)연 합 뉴 스. 무 단 전 재-재 배 포 금 지.>

